

“경제학적 상식과 동떨어진 주장”

《녹색정책》 서평에 대한 저자의 반론

이정전

서울대 교수·경제학

같은 현상을 두고도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지는 일은 우리 주위에 흔하다. 같은 현상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 견해를 달리하는 일도 흔히 있다. 전공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녹색정책》은 경제학을 전공한 필자가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다. 출판저널(제196호)에서 《녹색정책》에 대하여 서평을 한 논평자는 법학을 전공한 교수다. 법학을 전공한 교수가 경제학 책에 대하여 논평하였으니 여러가지 재미있는 반론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환경세 실시에 대해

최근 외국에서 환경세 도입문제를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세’라는 명칭의 환경세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몇몇 경제학자들이나 관료들이 환경세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환경세의 제일차 목표는 환경오염행위를 억제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정책》에서 필자는 환경오염 억제효과를 극대화하는 환경세를 도입하되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세 세수만큼 근로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그래야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이 억제되는 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세의 감세와 근로소득세의 감세가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생산 및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런 주장은 필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이미 선진국가의 유수한 경제학자들이 충분한 논거에 입각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녹색정책》에서 필자는 이 점을 충분히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도 그런 효과가 발생하겠는가에 대하여는 약간의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나 반론의 이론적 근거는 박약하다는 점도 《녹색정책》에서 필자는 자세히 밝혔다.

그런데 논평자는 “감세를 해도 환경세를 도입한다면 총체적 세금은 줄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서평에서 말하고 있다. 총체적 세금이 줄지 않

같은 현상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견해를

달리하는 일은 흔하다.

《녹색정책》은 경제학을

전공한 필자가 경제이론에

입각해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을 서평한 논평자는

법학을 전공한 만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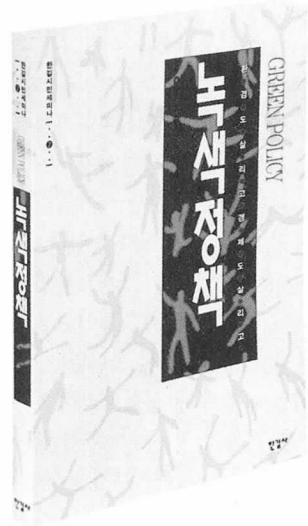
재미있는 반론이 많았다.

는다고 해서 환경오염 억제효과와 고용증대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논평자의 주장을 필자는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경제원론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하기 곤란한 주장일 것이다. 그만큼 논평자의 주장은 경제상식과 동떨어진 주장처럼 들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총체적 세금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예컨대 휘발유세를 대폭 올리고 디젤엔진에 쓰이는 연료에 대한 세금을 대폭 낮추어 준다면, 당연히 휘발유 자동차의 구매나 이용은 감소하고 디젤엔진 차의 구매나 이용은 증가하리라는 것은 경제학 상식이다. 총체적 세금액이 일정하다고 해서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경제이론상 이해하기 곤란한 새로운 이론이므로 논평자는 충분한 논거를 대야 할 것이다. 총체적 세금액이 줄지 않더라도 조세의 구조가 바뀌면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경제학 이론으로 얼마든지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비효율적’이라는 말의 의미

《녹색정책》에서 필자는 화석에너지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만 대기오염 및 교통체증의 주된 원인인 화석에너지 이용이 감소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논평자가 서평에서 언급했듯이 이 주장을 곧 “원자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엄청난 비약이다. 화석에너지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전기와 휘



발유, 등유도 아끼고 공장은 종전보다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하게 되므로 국민경제 전체로서 에너지 수요 그 자체가 감소한다.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도 경제이론의 상식이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실증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국민경제 전체로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면 원자력에 이용한 에너지가 종전보다 덜 필요하게 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화석에너지에 대한 세금의 인상은 잘만 하면 원자력에 대한 수요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 역시 경제학원론 수준의 경제이론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논평자는 《녹색정책》에서 필자가 “법적 규제를 통한 환경정책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한다”고 질책하고 있는데, 《녹색정책》 어디에도 그렇게 규정할 바가 없다. 다만, 법적 규제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을 강조했을 뿐이다. 비효율적이라는 말과 ‘완전한 실패’는 전혀 다른 말이다. 비효율적이란 말은 소요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다는 말이다. 사실 이런 의미로 비효율적이란 용어를 경제학자들은 상시 사용한다. 그리고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법적 규제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서구의 경제학자들이 흔히 하는 주장이고, 환경문제에 정통한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녹색정책》에서 필자는 “개발을 위한 토지와 보전을 위한 토지의 적정비율을 찾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주장했으나, 논평자가 서평에서 말했듯이 “이를 유지하자”고 제안하지는 않았다. 《녹색정책》을 조금만 더 읽어내려 가면 누구든지, 적정비율을 찾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편법을 찾아서 실행할 수밖에 없으며, 선진국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필자의 설명을 금방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필자 자신도 여러가지 대안적 편법들을 《녹색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든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시 환경의 가치를 계산해서 경제성 속에 포함시킨다면 개발을 위한 토지와 보전을 위한 토지의 적정비율에 조금이라도 근접하는 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을 논리적으로 보이고 있다.

실적 보조금은 유명한 정책수단

논평자는 “그러나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재활용 산업을 육성시키자는 주장은 시장경제기능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지는 저자의 주장과 상치되며”라고 서평에서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주장을 조금만 더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저자는 《녹색정책》에서 필자가 의미하는 보조금이 왜 시장경제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정책수단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필자가 말하는 보조금은 ‘실적 보조금’, 예컨대 공해업체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일 때 줄인 양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말하자면 환경세의 정반대(마이너스의 환경세)를 말한다. 환경경제학 교과서에 실적 보조금은 전형적으로 시장경제기능을 통한 정책수단으로 소개된다. 이 실적 보조금은 몇년 전에 미국 시카고대학의 저명한 법학자로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코오스 교수가 시장경제기능을 활용한 환경정책을 역설하면서 제안한 유명한 정책수단이다.

여하튼 《녹색정책》에 대한 출판저널의 서평을 보면서, 경제논리에 입각한 주장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지며 어떤 오해를 사는가를 읽을 수 있었던 점은 필자에게도 좋은 교훈이었다. ❖